제2차 육아선진화 포럼
다문화사회의 육아지원정책

육아정책개발센터는 제2차 육아선진화 포럼을 11월 3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다문화사회에서의 육아지원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로서 2명의 발제자가 주제발표를 한 후, 각 주제당 3명의 지정토론자가 종합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의 좌장은 지성애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장이 맡아서 진행하였다. 주제발제 및 토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주제발표 1. '다문화 가정의 현황과 과제' 개요

발제자: 박경자(한국아동학회)

본 원고에서는 국제결혼 가정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한국 사회의 다문화의 진행정도, 다문화 관련 현황, 다문화 가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정책들을 고찰하였다. 주목해야 것은 전체 다문화 가정 아동 중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로서, 앞으로 이들 가정의 육아지원정책 및 영유아 교육 · 보육정책에 주력을 해야 할 대목이다.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은 현재 중앙부처의 각 부처별—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여성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민간기구 · 단체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부처가 인권이나 교육관련 다문화 업무에 관여하고 있어 부처간 업무 중복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다문화 가정의 육아지원을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총 2,433억원을 투입할 계획 하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은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대한 낮은 접근성, 제한된 비용부담능력, 아동빈곤의 심각성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과제로 미취학 아동을 위한 양질의 육아지원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가능성 제고, 육아지원기관의 다문화 관련 지원정책과 규정, 지침 등의 마련, 다문화배경의 영유아교사 채용의 시도 및 점진적 확대,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모국어를 자녀가 습득할 수 있는 이중 언어 습득의 환경 제공, 각 부처별 업무 중복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부처간 지원정책의 체계적인 조정 및 협력의 필요성,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발달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발달상의 문제의 조기 진단 · 발견 · 처치, 다문화 가정 취학전 아동의 상세 현황 파악 등을 제안한다.

[왼쪽부터 백선희, 이향란, 문무경, 박경자 교수]

우리 보다 나은 서구 사회로의 'out-bound' 국제화에서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국가로부터의 'in-bound'의 국제화라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있어서 한국인들은 '한국인화'라는 다문화 정책기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열린사회로 나아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교육이 필요하다.

지정토론1. 백선희(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발제자의 원고내용에 대체로 동의하며 앞으로 다문화 정책은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강가족지원센터보다 다문화지원센터가 더 많이 보급된 점은 정책의 비효율성을 보여준다. 정책 대상 규모와 범주에 합당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다문화 가정만이 필요로 하는 욕구와 사회적 급여를 일반 관련 정책의 것과 혼동 내지는 중복해서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유행에 편승한 즉흥적인 정책대응이 아닌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학문적 정의, 사회적 통념, 정책대상을 분명하게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2. 이향란(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부설연구소)

현재 우리 다문화 정책의 기조인 '한국인화'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어보다는 한국어 사용을 강제하면서, 어머니와 자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힘들게 하고, 자녀의 한국어 습득에도 걸림돌이 되는 등 문제점이 크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의 기조와 교육프로그램의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의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과 이들 아이들의 심리적 · 정서적 이해를 돕기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지정토론3. 문무경(육아정책개발센터)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관련하여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매 3년마다 다문화 가정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현재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이 '관주도적인 다문화주의'라는 점에서 빠르게 한국인화하기의 동화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책의 방향과 목표가 모호하며 추진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 주제발표 2 '다문화 사회에서 영유아교원양성: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개요

발제자: 최민수(미래유아교육학회)

본 원고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다문화 가정의 한 범주로 보고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한 영유아 교원양성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다. 발제원고의 주요 내용은 통일한국의 영유아교원 교육제도 및 정책방향 모색(2장), 북한이탈주민 인적자원의 영유아교육현황 취업과 재교육방안(3장), 남북한 영유아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과 교류방안 모색(4장), 통일한국의 영유아교원 교육제도 및 정책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5장) 등이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기반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유치원교사 자격은 4년제 이상 학사학위 수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육교사는 3년제와 4년제를 근간으로 하여 2년제 이상의 전문학사 수준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인적자원을 영유아교원으로 육성하여 취업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남북한 영유아교육 현장지원과 상호교류 기회를 확대하여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고, 인정하며 이해의 공감대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지정토론1. 이미정(한국보육학회)

통일을 대비하여 구체적인 준비를 촉구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큰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한국에서 영유아교사 양성과정 교육프로그램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양성제도의 틀을 다르게 제시한 점은 수용하기 어렵다. 또 북한이탈주민 인적자원을 영유아교원으로 양성하여 취업으로 연계하자는 방안 역시, 교사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통일한국에서의 영유아교원 양성은 모두 3년제 이상 학사학위 수준으로 동일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탈북인적자원을 영유아교원으로의 고용에 대해서는 '자문역할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정토론2. 임희옥(한국보육정책학회)

통일한국사회에서 교육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교육 본연의 자리매김을 가능하도록 영유아교사양성 및 재교육훈련, 현장교류의 확대 방안은 의미있는 제언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인적자원의 영유아교원양성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특별한 시도이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논란의 여지가 클 수 있는 정교사 채용보다는 보조교사나 부담임으로 채용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현재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는 유아대상의 교육프로그램과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정토론3. 정선아(한국유아교육학회)

발제자가 제안한 통일한국에서의 영유아교원의 양성과 제도에 대한 정책은 현재 남한의 영유아교원 양성과정의 이원화, 교원의 낮은 지위 등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한국에서의 남북한 영유아 교원 양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통일의 원칙과 방향, 전략적 과제에 대한 검토가 먼저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을 다문화 시대에서의 다문화 속성을 지닌 하나의 주체적 집단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남한과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가정은 다수집단(남한)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주변화(marginalization) 방식을 취한다는 연구가 있는데,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자 집단을 인정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동등한 조건을 부여하고 더 나아가 문화적 통합의 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의 증진을 위한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왼쪽부터 최민수, 정선아, 임희옥, 이미정, 지성애 교수]

정리 : **이윤진**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